



濁流清論

제4호 2010년 2월 23일(화)

발행인 : 박영무 / 편집 : 편집위원회

< 알려드립니다 >

◇ 화요보고대회

- 일시 : 매주 화요일 11시 45분
- 장소 : 을곡관 1층 로비

1월 12일(화) 부터 매주 화요일 11시 45분-12시 45분에 화요보고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적한 현안에 대해 재단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대책 수립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교수회 대의원 또는 교수회 사무실(구내 2240)로 문의 바랍니다. 많은 교수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수시로 원고 접수합니다.

보낼 곳은 교수회. 이메일 (makim@ajou.ac.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솔밭에서: 재단과 대학의 바람직한 관계	1
법은 최소한의 상식일 뿐이다	2
대학의 거버넌스와 신뢰의 위임	3
소식	5
총장내정자 논문 표절 관련	6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광고	7
편집위원회 : 강명구, 구형건, 김혜선, 안재홍(편집책임), 이순일, 이재호, 한호	

배경사진 : 김효동(미디어학부) 교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솔밭에서:

재단과 대학의 바람직한 관계 : 문 제의 제기(편집위원회)

법은 최소한의 상식일 뿐이다(김 준한)

대학의 거버넌스와 신뢰의 위임(독고 운)

문 제의 제기

편집위원회

공문의 일차적 목적은 조직의 권위 있는 결정사항을 구성원들에게 전달해주는 일이다. 읽는 재미로만 치자면 무미건조하기 이를 데 없는 기능적인 글이다. 만일 업무상 필요 외로 공문을 즐겨 읽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십중팔구 사전 읽기를 독서취미로 가진 사람일 확률이 높을 것이다. 그러나 아래의 두 공문을 자세히 비교해가며 들여다보면 가끔씩은 조직의 구성원들이 왜 공문에 무조건 무관심해서는 안 되는가 이해가 갈 일이다.

첫 번째 문건은 2010년 2월 초하루 재단이 전 교직원에게 보낸 공문이다. 한 번 그대로 옮겨서 밑줄 친 부분에 유의해서 읽어보자

친애하는 아주가족 여러분! 오늘 개최된 학교법인 대우학원 제281차 이사회에서 세 분의 총장후보자에 대한 개별 인터뷰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아래의 후보를 아주대학교 제13대 총장으로 임명.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3대 아주대학교 총장: 소속 기계공학부, 직급 교수, 성명 이수훈, 임명일자 2010년 3월 1일부> 훌륭한 신입 총장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구성원 모두가 합심 협력하여 아주대학교의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가일층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아주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10년 2월 1일 학교법인 대우학원 이사장 尹元錫

핵심은 이사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훌륭한 총장을 모셨으니 친애하는 아주가족들은 모두 힘을 합하여 앞으로 나가자는 말이다.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사시관계에 비추어볼 때 의문이 없기 힘들다. 한 후보자 당 10여분 남짓의 질의-응답형식 인터뷰에 기초한 정보로 얼마나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심도 있는 논의 과정에서 기준으로 삼은 후보자의 덕목인 “훌륭함”이란 구체적을 어떠한 면을 말함인가? 지도자로서의 자질인가, 학문적 정직성과 수월성인가, 그도 아니면 재단에의 충직성인가? 아주대학 구성원의 대부분이 “심도 있는”과 “훌륭한”이라는 형용사의 구체적 의미를 재단과 공유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 아무리 재단이 “친애”를 하여도 교수들이 “가일층 분발”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두 번째 문건은 다음 날인 2010년 2월 2일 율곡관 제 1회의실에서 개최된 임시교무회에서 심의 의결된 제 2호인 사학진흥기금 기재허가 승인관련 문건이다. 이것도 그래도 옮겨보자.

- 한국사학진흥재단 기금사업팀-24호(2010.1.8) 2010년도 사학진흥기금 융자금 가배정 결과 통지 및 융자금 청구안내

항 목	신청 내용
기채신청액	5,000,000,000원 (금 오십억원)
기 채 처	한국사학진흥재단
기채기간	기채일로부터 10년 (5년 거치 5년 상환)
이 자 율	년 4.41% (변동 금리)
담보제공	신용
용 도	종합관 외 2건 신축공사
상환재원	학교회계

내용이 명확한 문건이다. 아주대학이 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4.41%의 이자로 50억을 꾸어 종합관 외 2건의 건축공사

를 한다는 내용이다. 아무리 명확하여도 아주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종합관 규모를 가늠하건대 50억은 전체 건축비 중 그리 많은 액수가 아니다. 이 정도는 당연히 재단이 내야 하는 것 아닌가? 아니면 그나마 돈이라도 벌어서 건물이라도 지으려는 ‘결단’을 높이 사야하는 것인가? 또 다른 의문도 든다. 도대체 어떻게 변제하겠다는 것인가? 재단이 갚을 것인가 아니면 결국 등록금 받아서 갚을 것인가? 재단은 몇 년 치 법정전입금도 내지 않고 있으니, 결국 등록금이 주 재원인 교비로 변제하게 될 것이다.

첫째 공문과 둘째 공문을 합하면 현 재단의 권한과 책임관계가 구체적이고 집약적으로 드러난다. 재단의 권한은 친애하는 아주가족을 대신하여 심도 있는 논의로 훌륭한 총장을 모시는 것과 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다. 재단의 책임은 아주가족들이 합심협력하여 가일층 분발하도록 독려하는 것과 등록금 받아서 교비로 빌린 돈을 갚도록 하는 것이다. 재주는 꿈이 부리고 돈은 왕 서방 차지라더니, 대학은 꿈이고 재단은 왕 서방인가? 무엇이 문제인지 다음 두 글을 통해 살펴해보도록 하자. 김준한 교수의 글은 “상식”의 관점에서, 독고운 교수의 글은 “신뢰의 위임”이라는 관점에서 현 아주대학 거버넌스의 문제점을 천착한다.

법은 최소한의 상식일 뿐이다

3주 전 “법인과 대학의 관계”에 대한 원고 청탁을 받고 아주대학교의 지배구조에 대한 글을 쓰려고 했으나, 그 사이 벌어진 차기 총장 선임 과정을 보면서 아주대학교의 암울한 현실을 다시 한 번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하여 지배구조를 논하기 이전에 대학 운영에서 지켜져야 하는 너무나 당연한,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주대학교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기본 상식 얘기를 하는 게 순리가 아닌가 싶다.

총장 선임 결정은 법인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일이며, 구성원 누구도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 총장 선임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후보자들의 자격이나 능력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라는 조항은 정관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법인이 주장하는 법 형식 논리로 한다면 이런 과정을 거칠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법인은, 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우수한 대학들은 이런 과정을 거치는 지 생각해 보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자명하지 않은가? 대학 총장의 선임 과정에서 그 최종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 상관없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것이 상식에 속함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다. 중학교 때 짬 배웠던 것으로 기억되는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라는 말이 기억난다. 법인은 법을 지켰다고 구차하게 강변할 것이 아니라, 상식을 벗어난 일은 하지 않는 뉘그러움을 보여 주는 것이 최소한의 책무를 다하는 자세일 것이다.

김 준한(인문학부 교수)

나아가 법 형식 논리를 위해서 규정의 제.개정까지 하는 것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이다.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작년 11월 법인은 교수회의 대학평의원 추천권을 없애고, 평의원 추천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도록 정관을 개정하였다. 아마도 정관에 교수회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나아가 교수회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것 역시 법 형식 논리에 집착하는 태도로 보인다. 결국 지난 12월 평의원 5명은 교수회가 제안한대로 결정되었다. 대학평의원 추천권은 교수회에 부여하는 것이 상식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상식을 벗어난 일을 하기 위해 법규의 제.개정을 불사하는 불행한 모습이다. 작년 봄 박종구 부총장의 임명을 위해 졸속으로 단행한 정관 개정 역시 유사한 행태이다. 상식에 어긋나는 일을 덮는데 필요한 법 형식 논리의 근거 마련을 위해 규정을 졸속으로 제.개정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직 운영에 독약이 될 뿐이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로서 이번 총장 선출 과정에서(도) 법인의 교육철학이나 아주대학교의 비전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총장을 선임하려는 노력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혹시 총장 선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법인의 지시에 잘 따르는 것은 아니었을까 우려하는 교수들이 많다. 이는 지난 4년간 이사장-총장 관계에서 나타난 행태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구성

원들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다. 만약 법인의 총장 선출에 임하는 태도가 이러하다면, 아주대학교의 발전을 기해야 하는 법인으로서의 자가당착적 행위이다. 물론 이사장과 총장의 협조는 대학 운영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서로를 감시하면서 건설적인 의견교환을 통해 대학 발전에 힘을 모으는 노력은 볼 수 없고, 흔히 말하는 갑-을의 관계가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인 것은 정상이 아니다. 이제라도 법인은 학교법인의 교육철학과 아주대학교의 비전을 제시하고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얻는 노력을 하며, 총장 선임을 비롯한 대학의 모든 운영에서 이런 취지를 십분 반영하려는 진솔한 노력을 해야 한다.

한편 대학 본부의 운영은 괜찮았지도 반성해 볼 일이다. 최근 들어 부쩍 대학 본부의 비상식적인 결정이나 규정에 대한 행정 편의적이며 상식에 어긋난 해석으로 인하여 분통을 터뜨리는 동료 교수들을 많이 보았다. 안타까운 상황이다. 법인과 마찬가지로 대학 본부 역시 법 형식 논리 뒤에 숨어 양심을 희롱하지 말고, 상식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권한이나 규정을, 잘못 된 결정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는 행태도, 법인의 그것과 어찌면 그리 닮았는지 신기할 정도이다.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을 만들거나 또는 다른 편법을 통해 결정의 근거를 만들으로써 상식을 외면하는 일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대학발전을 위한 교육지책이었다는 말이 하고 싶겠지만, 그래서 대학 발전이 있었는지 되묻고 싶

다. 어느 조직이든 구성원들의 의견이 수렴되어 상식 수준에서 이해 가능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구성원들이 순응하게 되고, 이러한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음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대학의 비전은 어떠한가? 이 글을 쓰려고 ‘아주비전 2023’을 다시 검토해 보았다. 본인이 아둔한 탓도 있겠지만, 거의 공감이가 가지 않는다. 너무 상투적이다. 아주대학교의 특성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니 이 비전이 학교 운영이나 구성원들 행동의 나침반 역할을 할 수는 없다. 공감대는 더더욱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비전 달성을 위해서는 리더의 역할이 중요한데, 총장의 이해와 노력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현재 아주대학교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대학의 위상은 추락하고, 구성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를 바꿀 수 있는 리더십도 자원도 정책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총장 선임 과정에서 보인 법인의 행태는 우리의 암울한 상황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미묘하고 복잡한 지배구조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 우선 대학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법인과 대학 본부의 책임자들이 조직 운영의 기본적인 상식을 지키도록 강제할 수 있는 뚜렷한 비전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한다. 이런 전제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대학 발전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으며,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는 헛수고이다. 법인과 대학 본부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대학의 거버넌스와 신뢰의 위임

독고 윤(경영대학 교수)

I. 대학의 주인

약 10여 년 전 식구들과 대학의 주인은 누구일까라는 이야기를 밤새 한 적이 있다. 설립자가 어찌어찌해서 대학의 주인이라는 주장과 바로 똑같은 이유로 누구누구도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예가 너무 많아 결국에는 “그 대학의 발전과 함께 한 모든 사람들”이 주인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정확한 답을 찾지 못한 것 같아 찔찔해하던 나에게 로조브스키(Rosovsky)의 저서(The University: An Owner's Manual)가 시원한 답을 주었다. 이 책은 사람들이 국가를 “나의 조국”이라고 말하듯이, 대학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럿 있으며, 이들의 각기 다른 기능과 역할을 논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의 조국”처럼 대학에 대한 소유권을 확대한 관점에서 보는 시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대학에 속한 사람들의 제각기 다른 역할과 기능은 “나의 대학”이나 “어느 특정인의 대학”이나에 따라 현격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 시민의 역할과 기능이 민주국가나 또는 봉건국가나에 따라 현격히 다르듯이 말이다.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당연히 요구할 설립자와 기부자들 외에 확대한 관점에서 볼 때 대학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럿이 있다. 나는 판사가 법원 그 자체라고 말하듯이, 교

수도 대학 그 자체라고 믿는다. 나의 주장이 오만하게 들린다면, 적어도 대학의 중추 기능인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는 교수가 없는 대학은 있을 수 없다는 뜻에서라도 교수들은 대학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학생들이야말로 대학의 존재 이유인 만큼 대학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졸업생들도 또 다른 주인이다. 직원들도 주인으로서의 위치를 주장할 것이다. 대학에 많은 돈을 주는 정부도 대학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근거를 갖고 있다.

II. 주인들의 의사결정

대학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이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직접 참여에 가장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대학의 의사결정 권한을 교수, 학생, 직원 간 3분의 1씩 균등하게 나눈 전후 유럽 대학들의 패리티(parity)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패리티 원칙이 유럽 대학들을 급속히 쇠퇴시킨 주원인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대학에서도 여러 다른 조직처럼 모든 업무와 이에 수반하는 의사결정을 누군가에게 위임하고 있는데, 위임과정 또는 위계(hierarchy)질서는 교육과 연구의 질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위임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 중 우선 면학 권리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의사결정을 이사회, 총장 그리고 교수들에게 위임할

때 발생하는 문제부터 보도록 하자. 예컨대,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 주식회사에서 투자자는 경영자가 회사를 제대로 운영하는지 감시를 해야 하는데, 이런 감시에는 수고와 비용이 따른다. 투자자가 여럿인 경우 투자자는 경영자에 대한 감시를 '내가 하지 않고 남이 해주기를 바라라' 무임승차(free rider)문제에 빠지며, 그 결과 경영자에 대한 감시가 부실해지고, 경영자는 투자자의 권익을 뒷전에 놓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할 수 있으며, 결국 투자자가 손실을 입게 된다. 더욱이 투자자가 회사경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정보를 경영자보다 적게 갖고 있다면, 투자자가 경영자를 감시하는데 드는 비용은 더 들고, 투자자의 무임승차 문제는 더 심각해지며, 경영자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위(모럴 해저드라고 말한다)는 더 심해진다.

학생들과 대학을 경영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투자자와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 매우 유사하다. 학생들은 어떤 강의가 유익하고, 어느 교수가 잘 가르치며, 대학이 돈을 어떻게 쓰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등에 관해 잘 모르거나 아예 모른다. 학생들이야말로 무임승차 문제를 고스란히 안고 있으므로 대학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는 기업에서 투자자의 권익 보호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복잡한 문제다. 교수들이 학생들의 이익을 대변하여도(대부분의 대학에서 사실이었지만) 학습권 보호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

대학은 일상 업무의 상당 부분을 교수들에게 위임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학의 의사결정을 교수들에게 전적으로 위임하는 주장에는 현실적으로 여러 약점이 있다. 교수들이 이익집단이 전혀 아닌 것으로 가정함으로써 대학과 교수들 간에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상황을 배제한다 하더라도, 고등교육에 관한 의견은 어느 하나로 선택 또는 요약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의사결정과정에 그 자체가 효율성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도제(徒弟)교육을 받는 학자들에게는 1인1투표 의사결정 방식이 익숙한 것도 아니다. 의사, 레지던트, 인턴이 모여 수술방식을 투표로 결정하지 않듯이 말이다. 총장선출을 교수투표에 맡긴 대부분의 대학에서 바람직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사실도 “대학에서 다수의 의견이 반드시 최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로조브스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고등교육과 학문연구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나 철학은 마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상황으로도 전개될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은 풀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다. 우리는 소위 중립적인 의사결정이란 게 ‘나뉘 먹기’나 ‘복지부동’을 초래하는 것임을 자주 보아 왔지 않았던가. 특히 최근 몇 년 동안에.

III. 위임 절차의 쟁방향

대학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이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결국 누군가에 의사결정을 위임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위임절차 또는 위계구조의 맨 위에 있는 기구가 이사회다. 대학의 이사회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을 대신하는 대리인(agent)으로서, 이사회의 의사결정은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이해관계로부터 일탈해서 독립성과 전문성에 근거해야 함을 뜻한다. 위임받은 전문성과 독립성은, 예컨대, 교수들이나 직원들이 집단이익을 추

구한다면, 이들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 및 의무를 부여한다. 학과에서 교수 임용이나 승진이 부적절하게 일어났다고 판단하면 임용이나 승진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뜻한다. 중대한 과오를 범한 교수나 직원에게 벌을 줄 수 있는 사법적인 권한도 갖는다.

의사결정의 위임이란 아래에서 위로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다. 교육과정 편성을 교수들에게 맡기듯이, 교수임용이나 총장임명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장 많이 알고 가장 공정하다고 판단되는 교수들에게 구하는 절차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위임의 대표적인 사례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위임을 책무(accountability)라고 말하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위임을 협의(consultation)라고 말한다. 법이나 정관이 명시하는 권한은 책무의 이행을 뜻하며, 동시에 그 이면에는 협의의 절차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민주사회에서 권한과 의무가 병행하듯이, 문명조직에서는 책무와 협의가 병행한다는 뜻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대학이나 병원과 같은 조직에서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이란 구성원들이 1인 1투표에 의한 다수의견을 쫓는 것이 아니라 책무와 협의의 절차가 명확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의사결정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주인을 대신한다는 기능적인 관점에서 볼 때 대학과 기업의 이사회는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기업과 대학 간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경영자와 투자자 사이의 관계는 주로 계약에 의존하는데, 교육자와 피교육자 사이에는 전통적으로 계약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데 있다. 오랜 기간 교육자는 신뢰를 받아 온 사람이기 때문일 것이다. 회사의 이사회를 Board of Directors라고 부르지만, 대학의 이사회를 Board of Trustees라고 부르는 것도 대학은 신뢰를 받은, 아니 신뢰받아야 할, 기구라는 점을 뜻할 것이다.

IV. 우리 대학의 이사회는? 영혼을 팔아먹은 동물들의 집단?

신뢰의 위임(trustees)이란 단순히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대리인의 역할보다는 훨씬 더 숭고한 역할을 의미한다. 그 숭고함에는 학생들을 사랑하고 이들의 장래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다. 대학에서 무슨 좋은 일이 발생하면 누구보다도 더 기뻐하고, 나쁜 일이 발생하면 누구보다도 더 걱정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다. 신뢰의 위임이란 이사회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을 때 책임도 더 많이 지고 벌도 더 많이 받아야함도 뜻한다.

우리 대학의 이사회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설립자 김우중씨 비서출신이라서 설립자의 사익을 대변한다고 치더라도, 우리 대학의 이사회 구성을 보면 제법 그럴듯하다: 국제형사재판소 판사, 서울 법대 교수, 전 서울대 역사학 교수, 전 KIST 원장, 변호사, 회계사, 의사, 중견 재벌 그룹 회장, 대기업 사장, ... 이들이 재단과 이사회를 반대한 언행이 교수승진 거부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양아치’같은 발언을 이사회 회의록(2009.8.28.일자)에 남길 정도로 무식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관이 총장 임명 권한을 이사회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제멋대로 뽑는’총장선임절차가 적법하다고 우길 정도로 무식하지도 않을 것이다. 표절 상습범들

을 총장으로 임명하고 나서(그것도 여러 차례) 그 잘못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뻔뻔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대학의 이사회는 영혼을 팔아먹은 동물들의 집단이란 말인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총체적으로 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에 대해 조그마한 애정도 표시하지 않는 이사장과 이사회가

우리 대학이 안고 있는 크나큰 비극이다. 이런 비극의 지속을 막으려면, 이사장과 이사진의 교체를 시도해야 한다. 신뢰의 위임을 받아야 할 것이다. 구성원들로부터 신뢰를 위임 받기 위한 우리들의 자세부터 되돌아보자. 어려울 대일수록 기초로 돌아가자는 말처럼.

소식

I. 차기 총장 선임

2010년 2월 1일 법인 이사회에서는 교수회와 154분 교수들의 이름을 건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차기 총장 후보로 등록한 박종구 전 차관과 의학부 박기현 교수, 기계공학부 이수훈 교수 3인을 면접한 후, 표결을 실시하여 이수훈 교수를 아주대학교 차기 총장으로 내정하였습니다. 이수훈 교수

는 총 10표 중 9표를 얻었는데, 회의 수 일 전부터 비공식적으로 전해지던 얘기들과 종합하여 볼 때 이것은 회의 전에 이미 이사들 간에 목계가 있었을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II. 차기 총장 내정자 연구진실성 위반 의혹

2월 2일 화요보고대회 자리에서 교내 한 교수가 전날 차기 총장으로 선임된 이수훈 교수의 논문 이중게재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하였습니다. 이 교수는 당일 서문호 총장에게 이 사실을 제보하고 학교의 연구진실성 위원회를 가동하여 이 사안을 조사하여 주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교수회도 비록 개인 교수의 문제 제기이기는 하나 교수회 집회 자리에서 구체적인 증거물과 함께, 그것도 차기 총장 내정자의 연구진실성 의혹을 제기한 것인 만큼 교수회 차원의 조사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월 5일 교수회 긴급 대의원회) 자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이수훈 교수와 같은 전공인 기계공학부 교수 2인과 자연대 교수 2인, 그리고 정보통신대 교수 1인등 현재 교수회 대의원이 아닌 5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이수훈 교수가 책임저자로 되어 있는 논문 및 이수훈 교수가 지도한 박사학위 논문을 대상으로 조사 작업을 진행하여 2월 11일 교수회 대의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이를 추진 받았습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 본지 6면 참조)

교수회는 보고서의 공개를 최대한 늦추면서 내정자 본인, 재단 이사장 및 이사들, 현 총장과 연쇄 접촉하여 내정자의 자진사퇴를 유도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무위로 돌아가, 결국 2월 18일 저녁, 전체 교수들에게 보고서 전문을 공표하였습니다. 총동문회장도 이 사안을 대단히 엄중한 것으로 판단하여 재단 이사장과 현 총장, 내정자에게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 활동을 벌이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기 총장 취임 이전에 이 문제를 일단락 지을 것을 요청하였으며, 교수회도 교수회, 동문회, 대학본부가 함께 참여하는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2월 17일 이사회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환시 시키는 발언들이 복수의 이사들에게서 나왔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III. 연구진실성 위원회 본 조사 착수

차기 총장 내정자의 연구진실성 위반 의혹과 관련하여 교수회 자체 조사와는 별도로 진행된 대학 본부의 예비조사 결과, 2월 2일 제보된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며 제보된 내용 이외에도 이중게재와 데이터 중복 사용 등의 연구진실성 위반 사례가 인정된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본부는 이에 이수훈 교수의 연구진실성 위반 사례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기로 하고 참여 위원을 초빙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칙을 보면 조사의 진행과 보고서 채택 및 후속 조치 등 여러 단계에 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기 총장이 취임하기 전에 최종 보고서가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차기 총장의 영향을 철저히 배제한 상태에서 연구진실성 위원회의 보고서 발표 및

이에 기반한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상정하여 규정화된 것은 없으나 아주대학교 구성원들이 이런 상황을 합리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3년여 전 고려대학교에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연구진실성의 문제가 있던 당시 신임 총장이 취임 2개월여 만에 사퇴하고, 이후 명예교수가 총장 서리로 취임하여 차기 총장이 선임될 때까지 행정공백을 최소화한 예는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총장내정자 논문표절 관련

<이수훈 교수와 이필상 교수 사례 비교>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	이수훈 아주대 총장 내정자
경영학(재무관리) 교수	기계공학 교수
사회과학 분야에서 가장 흔한 학문윤리 위반 행위는 제자 또는 타인 논문 표절	공학 분야에서 가장 흔한 학문 윤리 위반 행위는 실험결과 조작, 데이터 변조, 중복 게재 또는 찔라미 논문
2006년 12월경 국민일보가 이필상의 제자 논문 표절 의혹 제기	2010년 2월 1일 이사회 총장 선출 직후 2월 2일 교수회 화요일동 보고대회에서 이수훈의 중복게재 의혹 제기
다른 언론사들이 앞다투어 보도 시작	교수회는 언론 보도 자체 중에 있음
2006년 12월 27일 이필상 “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고 방송에서 사과하면서 표절 부인	이수훈 묵묵부답
2007년 1월 고려대 교수의회 이필상의 논문에 대해 학문윤리 위반 여부 조사 시작	2010년 2월 중순 교수회 조사위원회 구성 및 예비심사 완료, 학문윤리 위반 내용은 아래에 밝힘.
● 동시에 조사위원회 위원장과 교수의회 의장은 현승중 학교법인 이사장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 중간조사결과를 재단에 보고함	● 윤원석 이사장은 이수훈 내정자의 학문윤리 위반에 관해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으며 ● 2010년 2월 17일 소집한 이사회에서 차기총장과 함께 일할 대학원장 및 처장들을 임명하였다 함.
조사 결과(언론 보도): ● 1988 이후 게재한 논문 중 8편의 논문에서 학문윤리 위반이 발견되었고, 이중 6편이 제자 또는 타인의 논문을 표절, 2편이 중복게재.	조사결과: ● 제자 2인의 박사학위 논문(2003,2006년)의 실험결과와 내용이 대부분 동일하여, 허위 학위를 수여한 행위로 판단됨. ● 논문 4편의 주요 데이터가 중복 사용되었으며 적어도 네쌍, 여덟 편의 중복논문이 발견됨 (추후 더 발견될 가능성이 많음) ● 여러 논문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저자 구성이 발견됨. ● 동일한 논문 2편을 갖고 연구비를 이중으로 수혜한 행위가 발견됨. ● 논문 1편을 1996년 2월에 발표하여 부교수 승진 업적으로 사용한 후, 2000년에 위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또 다시 게재한 후 정교수 승진 업적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음 (다른 논문 2편에서도 동일한 의혹이 추가적으로 제기됨). ● 상습성, 의도성이 농후함
이필상은 표절을 부인하는 석명을 할 때마다 교수회의는 즉시로 증거와 함께 반박하였음. 재단은 이필상의 사임을 유도하였음	이수훈 묵묵부답. 재단 묵묵부답.
해결 방법: - 총장직 사퇴 - 한승주 명예교수를 총장 서리로 임명하여 행정 공백을 메꿈.	교수회와 총 동문회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차기 총장 취임식 이전에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함.

위 표에서 드러나듯 이러한 행위만으로도 총장의 자격을 상실하기에 충분한 사유임. 게다가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음.

- 이중게재를 통한 연구비 중복 수혜 행위. (참고로 서문호 총장은 발견 즉시 한국연구재단에 보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
- 국문으로 쓴 논문(1996년 2월 2편)을 그래도 다시 게재(2000년 2편)하면서(번역조차 아님) 부교수 승진(1996년 3월)과 정교수 승진(2001년 3월) 업적으로 이중 사용한 행위(최소 two pairs of two identical publications)는 정교수 승진을 취소할 사유가 된다고 사료됨.
- 이수훈 교수가 지도한 두 학생의 2003년 박사학위 논문과 2006년 박사학위 논문의 실험결과가 동일한 사건은 본교가 허위박사

학위를 수여하게끔 교수한 행위로서 학교 당국의 엄정훈 조사와 대처가 필요함.

위 사항은 총장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교수 자격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함. 참고적으로 2006년 아주대학교는 모 의대교수를 교수직에서 해임한 바 있음. 해임 사유는 수편의 논문에서 데이터를 중복 및 변형 사용하여 과학 연구 윤리를 상습적, 의도적으로 위반하였고, 그에 근거한 의약품 개발 등에도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임.

당시 징계위원회는 향후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연구자들에 대한 연구윤리 교육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대학 당국에 제언한 바 있음. 상습적, 의도적으로 최근까지 연구윤리 위반을 해 온 분이 총장이 된다면 누가 이 제언을 실천할 수 있을까?

IV. 이사회 회의록에서 드러난 차기 총장 선임 과정의 졸속성

차기 총장이 선임되었던 제 281차 법인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http://www.ajou.ac.kr/servlets/ajouweb.board.servlet.BoatdListServlet?BoardId=163>) 많은 교수들이

의심했던 바대로 총장후보 등록 공고는 외부 일간지에 전혀 게재되지 않았으며 아주대학교 홈페이지에만 게시되었습니다. 그것도 로그인해서 들어가야만 공고를 볼 수 있었으니, 애초부터 외부인의 접근은 차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기가 막힌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사장은 "총장선출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문제이므로 이사회에서 의결로 정하면 됩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 어느 이사회에서도 총장 선출의 방법론에 대한 이사회 의결 과정이 없었으며 심지어는 보고 과정도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적어도 두 명의 이사가 총장 후보자 면접당일에 당시까지 진행된 선출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던 것입니다(회의록 참조).

공고는 어떻게 할 것인가? 추천위원회를 운용할 것인가? 검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추천 요건은? 등등이 예의 "총장 선출의 방법론"에 해당하는 각론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이사회에서 논의해 달라고 전임 교수회 의장이 작년 11월 중순 모든 이사들에게 서신을 보냈었던 것입니다 (탁류청론 제 3호 참조). 그러나 그 간 아무런 논의도 없이 단지 이사장이 정한 방식대로 공고와 접수가 끝나고 이제 후보자 세 명을 문 밖에 대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총장선출의 방법론"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는 단지 차기 총장 선임과정의 졸속성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차원을 넘어 총장선임을 위한 방법론이 이사회에서 사전에 논의, 의결되지 않고 상당 부분 진행 되었으므로 위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이번 사택에 관하여 보내주신 짧은 문구들을 저만이 허락하는 범의 내에서 모아보았습니다.)

- 예전에는 “법대로 규정대로”라는 말이 힘 없는 자들이 제 권리를 찾기 위한 절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대로 규정대로”는 법과 규정을 만들 수 있는 자들이 ‘내 맘대로 하겠다’는 뜻이 되었던군요.
-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야만의 행동은 공멸을 가져옵니다.
- 개인은 누구나 욕망을 표출할 수 있다. 하지만 노욕이 과하면 노추(老醜)가 된다.
- 이사장은 설립자의 아바타고 총장 내정자는 이사장의 아바타인가?
- 연구실 창 밖 아름다운 겨울 정경... 지금은 진창이 하얀 눈들을 더럽히고 있지만 여러분이 모아주는 따스한 햇살은 곧 아름다운 봄의 세상을 만들겠지요.
- 희망이란 길과 같은 것이다. 자꾸 다니면 길이 생기듯, 자꾸 모이면 희망이 생긴다. 우리 자꾸 모입니다.
- 2010년 2월 1일 이사회 의결: 역운(厄運), 구팽(狗烹), 어부지리(漁父之利), 아주의 눈물
- 율곡관 4층 복도에는 막 꽃을 피운 난의 향기가 그윽합니다. 율곡관 2층의 악취로 더러워진 마음까지 봄으로 가득합니다. 난꽃 구경 오세요.
- 설립자는 더 이상 이사장 뒤에 숨지마라.

광 고

3월말 발간예정인 <탁류청론 5호>의 주제는 “바람직한 대학 총장상”입니다. 관련하여 말씀하시고 싶은 경구들을 <소리 없는 아우성>에 보내 주십시오. 또한 다양한 형태의 글들을 수시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시면 대학사회의 담론

을 구성하는 다양한 원자재로 활용할 것입니다.

보내실 곳 : makim@ajou.ac.kr(교수회 이메일)



차기 총장 선출 과정의 부당성을 직시하며

아주대학교 차기 총장은 우리 대학의 건학 이념을 구현하고 ‘건전 사학’으로 성장 발전시킬 수 있는 인격과 소신을 가진 분 이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분을 총장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난 1월 12일 오후 학교 재단이 공지한 ‘아주대학교 총장후보지원자 등록 안내’ 내용은 대학 구성단체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아 독단적이며, 그 과정의 정당성도 확보되지 않았다. 아주대학교의 미래를 걱정하는 교수들은 현 학내 사태를 주시하고 그 동안 아주대학교가 지켜온 가치들을 지키고 대학과 재단이 함께 노력하여 아주대학이 한국 사학의 표본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다음과 같이 재단에 촉구한다.

첫째, 차기 총장은 구성원 단체의 의사를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선출되어야 한다. 이것이 대학 발전의 출발점이다. 최소한의 의견수렴조차 없이 선출된 총장은 대학 운영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지도력으로 발휘할 수 없다.

둘째, 차기 총장의 지도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재단은 현재 진행 중인 총장 선출과정을 중단하고 교수회를 포함한 아주대학교 구성단체가 합의 제안한 총장선출 안을 논의하고 필요하면 수정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셋째, 김우중 대우학원 설립자는 현재 아주대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한 점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현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행위 일체를 중지해야하며, 윤원석 이사장은 현재 진행 중인 차기 총장 선출과정을 중단하고 지체 없이 대학 구성단체와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넷째, 우리 교수들은 재단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총장 선출 과정에 반대하여 총장 추천 및 피추천을 거부하며 각 단과대학(학부)별로 현 총장 선출 과정을 거부하는 성명서 등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며 적극 지지한다.

다섯째, 우리 교수들은, 교수회가 사립학교법과 아주대학교 학칙에 규정된 법정 기구임을 확인하고 교수회를 불법-임의 단체로 보는 재단 이사장의 시각이 크게 잘못되었음을 지적한다.

우리는 현 학내 사태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동시에 그 동안 교수회의 노력에 성원을 보내며 앞으로 진행될 교수회의 활동을 최선을 다하여 지지할 것이다.

2010년 1월 18일
아주대학교의 미래를 걱정하는 교수들

강명구, 강지혜, 강충권, 고광윤, 고영길, 공유식, 박노준, 구형건, 권익진, 김공한, 김광섭, 김광윤, 김경래, 김경일, 김동근, 김두현, 김대중, 김미란, 김상배, 김상열, 김서용, 김수덕, 김승범, 김승주, 김영길, 김영래, 김영진, 김완석, 김용진, 김옥환, 김은정, 김장훈, 김재현, 김종엽, 김준한, 김진수, 김철환, 김태승, 김현, 김현옥, 김형택, 김혜숙, 나상신, 남석현, 노명우, 노병희, 노재성, 독고윤, 류기열, 모선일, 문순재, 문우진, 민철기, 박경주, 박상규, 박영무, 박옥걸, 박용배, 박연희, 박영동, 박익모, 박주현, 박준은, 박재범, 박호환, 배형욱, 백은주, 범진환, 성제영, 송현호, 신강현, 신승수, 신지범, 신호준, 신희천, 안성혁, 안영환, 안재홍, 안재훈, 오동석, 오성근, 오세기, 오수기, 오세창, 원동철, 유연우, 유선무, 유재석, 유승현, 유승화, 윤성승, 윤성화, 이진모, 이경호, 이규상, 이규억, 이민규, 이병욱, 이상민, 이석현, 이수복, 이순일, 이왕휘, 이원희, 이재식, 이재의, 이재호, 이종수, 이종화, 이주희, 이창환, 이천우, 이해영, 이형천, 이혜경, 임신영, 임한조, 장재연, 전영목, 정경훈, 정영기, 정태선, 정형식, 조광순, 조도현, 조두진, 조상재, 조제운, 조재형, 조종열, 조진, 조위덕, 조은혜, 조창환, 주동표, 주인수, 진억용, 최기련, 최기주, 최운실, 최정철, 최진혁, 최윤희, 최홍근, 최태영, 하영화, 한만엽, 한호, 홍민선, 홍민성, 홍창호, 홍창형, 황의록 (이상 154명)

총장선임 바로하여 아주대학 살려내자!
아주대학교 교수회

독선재단 대학퇴보 이사장은 물러나라!
아주대학교 교수회